



북한 실체 이해와 통일 문제 바로알기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www.nknet.org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무모한 군사도발과 위협을 일삼는 실패한 불량국가, 전근대적 3대 왕조세습 국가로 낙인찍혀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김정일의 나라' 북한!

북한은 對南 무력 적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적으로 군을 동원한 공포정치를 펴면서 동시에 집요하게 對南 위협과 선동·분열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아 천안함·연평도 공격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북한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증하는 등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對南 전략의 실체와 이에 동조하는 從北세력 주장의 허구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이한 對北 유화론 주장의 위험성을 재인식, 국민 정신무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 01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對北원칙 견지가 필요합니다 4
- 02 남북관계 경색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못 길들인 데 기인합니다 5
- 03 '전쟁·평화론'은 남북한 간 경제·군사력 격차를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6
- 04 「6·15, 10·4선언」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 합의입니다 8
- 05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입니다 9
- 06 北 식량구걸은 절대량 부족보다 정치·군사적 목적에 기인합니다 10
- 07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對北제재 조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11
- 08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對北 심리전은 필요합니다 12
- 09 인류·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13
- 10 '준비된 통일'은 國運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4
- 11 북한은 최근 남북 비공개 접촉의 진의를 왜곡 주장하고 있습니다 15

01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對北원칙 견지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對北정책은 북한에 끌려 다니던 과거 일방주의적 대화·협력 방식에서 탈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한 대응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협력 제의에는 적극 응한다는 방침 아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對北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해 왔다.



북한의 포격으로 처참히 부서진 연평도 가정집들의 모습



천안함·연평도 공격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남북교역액(09년 16억 7,908만弗→10년 19억 1,225만弗)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5·24' 對北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무조건적 지원 요구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자 對北 강경책으로 왜곡하며 對北정책의 전환 압박 및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할 의도하에 계속해서 남북 긴장국면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

02

남북관계 경색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못 길들인 데 기인합니다

●●● '5·24 조치'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의 대결적 對北정책이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연평도 공격을 불러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무력도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주장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과거 DJ·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펼치던 와중에도 1·2차 연평해전(09·02년)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06년) 등 對南 도발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광명성 2호' 장거리로켓 발사 장면



북한의 파격으로 두 동강이 난 천안함 선체의 인양 모습

그때마다 정부는 북한의 적화야욕을 간과한 채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함으로써 '긴장 유발 후 흥정'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심어줬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대화를 계속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인식하에 이뤄진 '문지마식 對北 지원'(70億弗 규모)은 敵의 군비증강·핵개발 등에 악용됨으로써 안보위협 가중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최근 북한의 對南 위협은 정부 對北정책과 무관하게 과거와 같은 '생떼 쓰기'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무리한 3대 세습 추진에 따른 내부불만 무마용 등 다목적 포석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을 연상케 하는 북한의 포스터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를 촉구하는 從北단체 회원들의 시위

03

‘전쟁·평화론’은 남북한 간 경제·군사력 격차를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 천안함·연평도 공격 등을 계기로 북한의 호전성을 재인식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여전히 두텁게 깔려 있다.

이는 국민들이 과거 10년간 ‘돈으로 산 거짓평화’에 길들여진 데다 從北세력의 ‘전쟁이나, 평화냐’식 선전선동 전술이 먹혀들고 있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군사도발 목적은 권력세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갈등을 외부로 분출시켜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데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전쟁 공포감과 북한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켜 정부의 對北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국내 從北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南南갈등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적 의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 군사·경제력 격차 등 객관적 전력과 굳건한 韓美동맹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병력과 재래식 전력 면에서 우리에게 비해 數의 우위에 있고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전 승리의 관건인 해·공군 전력이 우리에게 비해 크게 열세인데다

경제난으로 군사장비 대부분이 구형이고 정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유류·식량 등 군수품 보급 능력도 열악한 상황이다.

남북 간 주요 무기 전력 비교

비교	남한	북한
전차	· 최신형 K1/K1A1 1,300여 대 및 T-80U 390여 대 · 차기 전차 ‘흑표’ 2017년까지 390여 대 도입	· 60년대 이전 생산한 T-54/55 2,500여 대 및 PT-76(500여 대)
함정	·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40여 척으로 北 2척에 비해 절대 우위 · 이지스함(세종대왕함·윤석 이이함 등)은 1,000km 밖 물체 1,000여 개 동시 추적 가능	· 대부분 150톤 이하의 소형, 2~3m 파고 시 해상작전이 어려움 · 현대적인 자동 사격통제장치 미비
전투기	· 90년대 이후 최신형 KF-16 130여 대 및 F-15K 50대 도입, 압도적 제공권 확보 · 2012년까지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도입(2대 8대 도입),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예정	· 50~60년대 모델인 MIG-17/19/21이 주력 · 현대 공중전 수행능력을 갖춘 신예기인 MIG-23/29는 50여 대에 불과

외교력·국제적 위상 등 비군사적 능력 면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월한데다, 특히 경제력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은 37배, 무역 규모는 135배에 이르는 등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면전 도발 시 주한미군(2萬 8,000여 명)과 함께 수십만 명의 美 증원군이 단기간 내 한반도로 전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 충분한 對北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 월남이 모든 객관적 전력에서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부분열과 공산월맹의 위선적 화해·평화 공세에 속아 패망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의 위협에 타협하려는 對北 패배주의부터 극복해야 한다.

신안보세대(1981~1990년생)의 對北 인식(단위: %)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서해교전 모습

04

「6·15, 10·4선언」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 합의입니다

●●● 1·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10·4 선언은 남북관계의 양적 진전에만 집착,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합의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15 선언은 막대한 불법자금(5億弗) 제공대가로 성사된 '뒷돈거래 합의문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데다,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용,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對南 통전책략 차원에서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를 명기, 북한의 對南 선전·선동 도구로 악용되었을 뿐 아니라 「6·15 남·북·해의 공동위원회」, 결성 등 국내의 친북세력을 결집시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南南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0·4선언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된데다, 최소 14兆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경험 관련사항을 국회동의 절차 없이 합의하고 이행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무책임한 합의이다.

특히 '서해상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 개념을 모호하게 해 NLL 분쟁수역화 등 시비 소지를 제공하고 영토양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05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입니다

●●● 북한은 국제제재 완화·경제실리 확보 등 세습체제 안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긴장고조→대화공세→對南 강경태도' 등 강·온 국면을 반복하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연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 의지가 있는 양 과시한 바 있는데, 이는 「5·24 조치」 무력화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상황 악화 시 책임전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대화공세 이면에서는 GPS 신호교란·영변지역 핵시설 확장·농협 전산망 공격 등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획책하며, 「핵전쟁·추가공격」 등을 지속적으로 위협, 안보 불안심리 유발 및 정부의 對北정책 전환을 압박하여 왔다.

이올러 對南공작 일환으로 對北지원 단체들에 反정부 투쟁 선동 팩스를 발송하는 등 불순행동을 지속적으로 획책, 이들의 인도주의를 빌미로 한 對北지원 활동이 북한의 統戰술책에 악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동해 표기 협의·백두산 화산 토론회 등 그들이 요구해 온 남북 간 접촉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음에도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가, 김정일 訪中 이후 돌연 남북대화 중단을 내세우며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스스로 그간의 대화제의가 기만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3대 세습 안착 및 내년 총·대선 등 정치일정을 겨냥, 국내 從北세력을 부추겨 위장 평화 공세 및 위협 심리전, 정부 비난·선동 등을 한층 노골화할 것이다.



北 식량구결은 절대량 부족보다 정치·군사적 목적에 기인합니다

●●● 북한은 2010년 12월부터 김정일 지시에 따라 80萬 톤을 목표로 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식량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천안함·연평도 공격 이후 잠시 주춤하던 국내 從北세력과 對北지원 단체들도 WFP 등 일부 국제사회의 對北지원 요구에 편승, 기다렸다는 듯이 對北 식량지원 주장 재점화를 획책하고 있다.

WFP의 北 식량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조사 방법·분석·내용 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 북한 내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 대비, 군량미 100여萬 톤을 상시 비축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1,800弗 수준으로 국토 면적이 6배인 아프리카 잠비아가 1,400弗, 영토가 비슷한 방글라데시가 1,600弗,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는 북한의 2/3 수준인 캄보디아가 2,000弗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특권층 중심의 왜곡된 분배구조와

김정일 정권의 주민고통 외면 등 민생고 해결의지 부족에 기인한다.

김정일 정권은 군량미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소위 '군량미 헌납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나마 배급된 식량마저 주민들로부터 다시 갈취해가는 등 식량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 2012년 주요 정치행사('강성대국 진입' 선전 및 김일성 100회·김정일 70회 생일) 대비 주민 선심용 곡물확보 △ 3대 세습 조기 안착 등의 목적으로 식량 사정을 과장, 국내외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식량지원 재개 시 쓰러져가는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켜 주민고통만 연장시키며, 제2의 천안함·연평도 무력공격 등 우리에게 실질적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공연 등 대규모 체제 선전 행사 강행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對北 제재 조치는 지속 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경제난을 가중시켜 체제 불안정성 증대 등 對北 압박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외화 수입·지원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폐개혁 후유증 속에 시장 확산으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뇌물·밀무역 등 일탈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민생고가 심화된 상태에서 김정일 통치자금 유입 차단으로 세습체제 구축 및 김일성 생일 100회 등 내년도 중요행사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對北 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 당시의 모습

‘對北 인권결의안’ 유엔 4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

안보리 ‘對北 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

아울러 연이은 韓美 연합훈련 실시에 따른 장기간 비상근무 체제 유지로 軍 사기저하 및 군기일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계속해서 국내 從北세력과 중국 등지에서 접촉을 획책하며 '제재 해제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의 對北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켜 이러한 대내외 곤궁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對北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對北 심리전은 필요합니다

●●● 북한은 무리한 3대 세습 추진에 따른 정치 불안정·경제난과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심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벼랑끝 전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교류·협력과 對北 지원을 통해 북한정권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적극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중동발 민주화 혁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철저한 정보통제와 무자비한 진압 등으로 북한 내 자생적 민주화 투쟁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배급제 붕괴로 장마당 활성화 등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부정부패 만연·배급주의 팽배 등 체제균열 현상이 점증하면서 주민의식 변화 등 점차 중동과 유사한 反체제 항쟁 유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만 득이 되었을 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북한주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對北 심리전은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 실세들의 호화·사치생활 등 수령 독재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알리고 자유·시장의식을 확산시켜 민심이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도 군인은 물론 일반 주민·엘리트 계층에게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對北 심리전의 파괴력을 알고 있고 이를 두려워하기에 對北 풍선 날리기 등에 그만큼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임진각에서 진행된 '對北 풍선 날리기' 행사

인류·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 해야 합니다

●●● 오늘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이후 300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과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15~20만 명이 요덕·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노예상태로 살고 있으나 북한정권은 이에 대한 개선 의지나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가혹한 폭력과 탄압으로 어떠한 형태의 저항이나 불만 표출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인식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同族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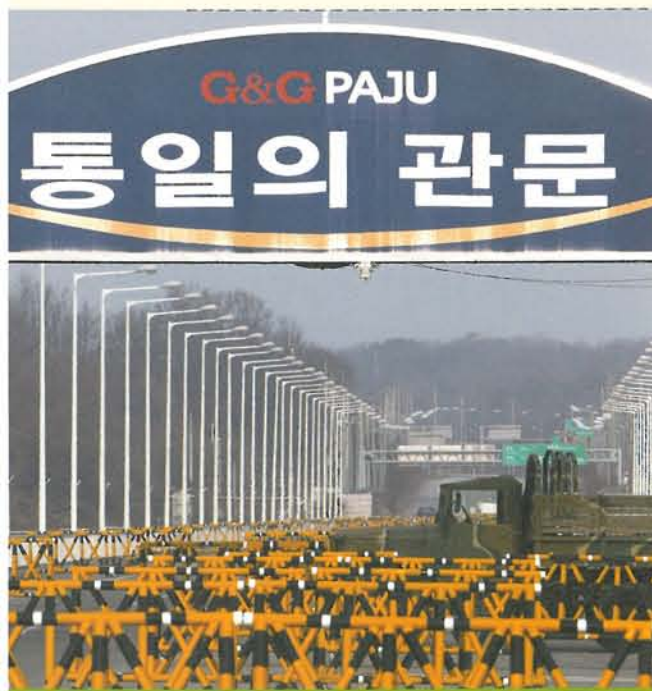
從北左派 세력은 내정간섭,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를 기피하며 '북한 인권법' 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反인간적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인도주의 명분으로 對北 지원을 주장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북한의 對南 위협은 정치 위기상황 타개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북한 인권을 말한다고 평화가 깨지거나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이는 거짓 평화이고 정상적 남북관계도 아닌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명철 씨가 그린 수용소 내 공개처형 장면



북한으로 이어지는 파주시 통일대교의 '통일의 관문'

10

‘준비된 통일’은 國運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난 10년간 소위 ‘평화적 분단관리’에 치중해 온데다,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사회혼란 초래 등 통일 후유증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형성되어 왔다.

특히 從北진영에서는 경제난·사회갈등 등 동서독 통합과정상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켜 독일식 통일은 ‘매우 불행하고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최대 1兆 5,000億弗 규모의 통일비용은 산출(Output)은 빼고 투입(Input)만 고려, 산정한 추산치인데다, 유·무형의 통일편익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왜곡·과장되어 있다.

시장 확대·일자리 창출·자원 확보 등 경제적 효과와 분단 관리비용 절감·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 통일편익을 고려할 때 통일은 우리에게 국격 상승·성장 잠재력 확충 등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통독 사례를 거울삼아 사전 준비할 경우, 통일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고 민간 외국자본이나 세계 은행 등의 다국적 자금 유치 등 국제 공조에 의한 財源 확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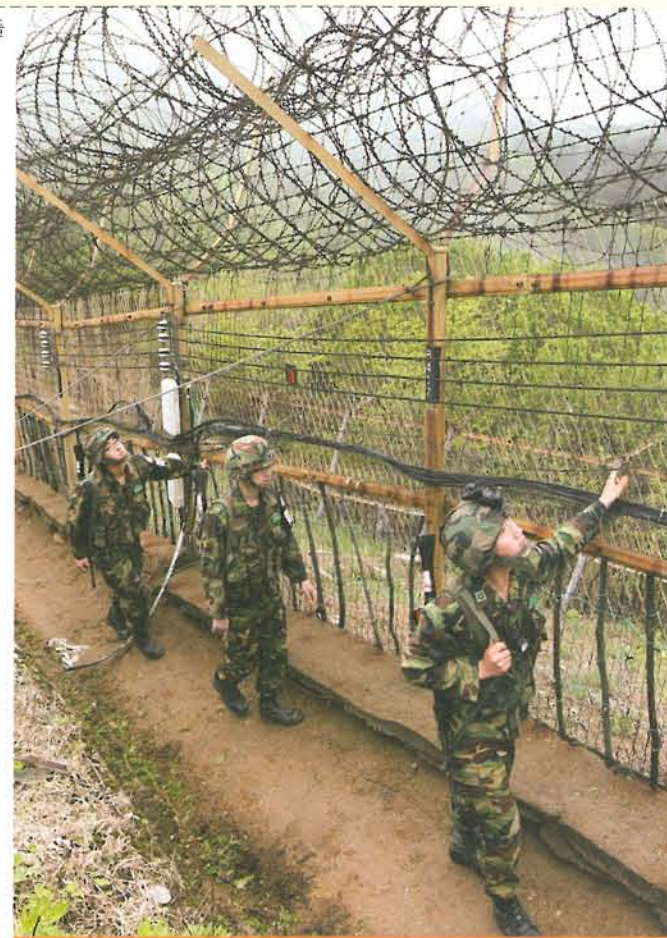
실제 독일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통일을 맞은데다, 동서독 사회보장 평준화·화폐 등가교환 조치 등 정치적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은 바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통일이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면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국제적 발언권도 크게 확대되었다.

통일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인 동시에 관리 여하에 따라 위기이자 國運 융성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美 골드만삭스, 09.5 ‘통일한국-對北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30~40년 내 GDP 규모가 프랑스·독일 나이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최전방의 장병들



●●● 지난 5월 북경에서의 南北 접촉은 북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카터」前 미국 대통령 訪北 기회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애걸해 온 것은 자신들 입에도, 마치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 연연해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접촉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미 합의한 ‘남북대화-미북대화-6자 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재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불과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함·연평도 공격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의미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떠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 정부의 對北 원칙론에 타격을 입혀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南南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로, 김정일 訪中에서 경제적 지원 확보 등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대외 시위용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 등 남북대화 재개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의 진의를 왜곡시킨 일방적 주장만 듣고 불필요한 공방을 벌여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북한의 이중적 對南 전략전술을 재인식, 對北 경각심을 높이고 안보관을 확고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1

북한은 최근 남북 비공개 접촉의 진의를 왜곡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실체 이해와 통일 문제 바로알기

북한은 對南 무력 적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적으로 군을 동원한 공포정치를 펴면서 동시에 집요하게 對南 위협과 선동·분열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아 천안함·연평도 공격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북한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증하는 등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www.nknet.org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 필운빌딩 신관 4층 전화번호: 02-723-6711~6712

FAX: 02-723-6715/ E-mail: nknet@nknet.org

※ 월 1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회원에게 통일·외교·안보 전문지 <NK비전>을 보내드립니다.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방법

- 홈페이지(www.nknet.org) 접속 후 '후원하기'를 클릭해 'CM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02-723-6711)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343601-04-060728

예금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